

행정도시 건설, 주변 중소도시 정비와 연계 추진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당초 취지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탄력을 받고 있다. 그 동안 한시적 성격을 지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승격하였고, 행정도시 건설현장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청사까지 마련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이미 지난해에 도시개념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5개 당선작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도시구조를 ‘2중 환상형(環狀型)’으로 확정했다. 현재 국내연구진이 행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이 77.3%(1,282만 평)가 완료되어 행정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 수립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된다. 2008년 청사건축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는 정부부처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가 개시된다. 행정도시 건설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 및 주민이주보상이 이루어지고, 2007년 이후에도 예산확보와 행정적 지원 조치가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도시건설 이후에 행정도시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도시 하나만 건설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첫째, 행정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도시도 하나의 통합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도시는 단기간 내에 인구 30만 ~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변도시의 기능 고도화 및 도시기반 현대화는 행정도시 건설 초기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도시민들의 서비스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 초기 자족성의 부족을 방지하는 경우 원활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행정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적 차원의 중추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도시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비록 행정도시가 계획대로 인구 30~5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집중을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결방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의 광역적 도시 네트워크 형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도시를 행정도시와 수평적인 연계,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행정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행정도시는 주변도시와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경제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도시는 단순히 수도권의 지방분산 기능을 수용하는 역할을 넘어 균형 있는 국토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주변도시의 물적 기반과 기능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 행정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정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부터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행정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변도시 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현대화를 위한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나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정비는 새로운 국토구조의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병행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는 행정도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대수도론(大首都論)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행정도시 반대론에 관한 충청권 정치인은 물론 행정, 경제, 교육, 문화예술, 언론계 등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제휴 노력이 확대되었으면 한다.